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적정 임금 산정 고시 의무 부과 등〉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446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적정 임금 산정 고시 의무 부과 등<br>(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5.

다. 회 부 일 : 2023. 11.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적정 임금 산정 고시 의무 부과 등 (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 <신설> |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 ○ <신설> | ○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책무 명시                        |
| ○ <신설> |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적정임금 산정 고시 의무 부과           |
| ○ <신설> | ○ 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조건 미준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 ○ <신설> |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확인 결과 이상 발생시 대금지급 거절 가능 |
| ○ <신설> | ○ 적정임금에 관한 규정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간 계약상대자에게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동 의무 위반시 발주기관에서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외에도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분

지급 확인 결과 이상 발생시 대금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반한 고용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노·사의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어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최저임금제와 유사하나, 최저임금과는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에 한하며, 직종과 기능 수준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최저임금제와 적정임금제 비교 ]

| 구분    | 최저임금제        | 적정임금제                      |
|-------|--------------|----------------------------|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 |
| 적용 방식 | 하나의 최저한도를 적용 | 직종별·기능수준별로 임금 하한액 적용       |
| 적용 목적 |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 | 근로자의 생산성 등에 따른 적절한 임금 지급   |

개정안의 발의 배경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건설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건설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련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업주는 인력 활용시 기능인력의 수준을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나, 동 증명서는 표준화되지 않아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경력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숙련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숙련기술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임금 삭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건설근로자 소득 수준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건설업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공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임.<sup>1)</sup>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건설공사를 예를 들면,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되어 있어 건설 근로자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

1)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지방계약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우원식의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됨.

또한 건설현장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착취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결국 건설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건설업계의 취업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되고, 이로 인해 취업기피 현상이 해소되며,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제고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들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각종 취약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할 것이며, 특히 현행법이 국가가 발주한 계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을 통해 적용<sup>2)</sup>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이고 국민 재원을 기초로 체결하는 계약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계약 조건 등에 근로자들의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근로조건 향상을 포함한 공익적 목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현재 국가계약에서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와 2단계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가 있음<sup>3)</sup>.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의 최저가격 중심의 낙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sup>4)</sup>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방식으로, 현행 낙찰방식 중 근로조건 관련 심사항목이 있는 것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유일함.

그러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계약대상<sup>5)</sup>이 한정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참고자료)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건설인력 고용’ 및 ‘사회적 책임’ 항목 중 한 항목<sup>6)</sup>에 불과함. 이마저도 ‘건설인력 고용’

3) ‘적격심사낙찰제’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하는 방식이고, ‘2단계 경쟁낙찰제’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 방식을 말함.

4)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는 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 등 노무비 위주의 가격 절감이 일어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6) 근로조건과 관련된 심사항목은 ‘건설인력 고용’ 및 ‘사회적 책임’ 항목 중 하나인 ‘건설안전’ 심사임.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직전 3개년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함.

항목은 최대 1.5점에 불과하며, ‘사회적 책임’ 항목 전체가 배점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100점 중 가점 2점에 불과하여 근로조건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가계약이 갖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등을 의무화하고, 계약조건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근로조건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어 공익적 목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계약법 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국가계약에서의 계약 상대자, 즉 민간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등 노무계약 사항을 국가계약법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도입된 최저임금과 달리, 특정 직종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하도급 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하는 사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 가능함.

둘째,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적정임금제는 제도 목적이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건설업 위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sup>7)</sup>에 따라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음.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 하에서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80~90%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적정임금을 반영한 공사비를 산출할지라도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어 사업주에게 배분될 것임. 그러나 건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윤 또는 재료비, 경비 등에서 노무비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악화 및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국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 체결 전에 모든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게 됨. 따라서 국가와 계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어떤 수급사업자가 어떤 근로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까지 계약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넷째, 적정임금 도입 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임금의 수준 결정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자 및 공익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적정임금도 각 직종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정안 제5조의7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산정·고시하는 경우, 각 이해관계자의 저항 및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임금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은 발주기관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사항<sup>8)</sup>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간 기업(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과 근로자 간 임금 등 노무계약 사항은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의 성격,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

8) 계약의 원칙, 계약의 종류(총액/단가, 단년/장기 등),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수의계약 등),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종합심사 등), 검사 및 대가지급, 제재 등 국가계약 체결·이행 관련 등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제5조의5(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6부터 제5조의9까지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라 한다)에게 제5조의7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
| <p><u>&lt;신 설&gt;</u></p> | <p>제5조의6(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제5조의7(적정임금의 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직종 및 기능의 임금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의 하나의 값으로 적정임금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에 근로자 임금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적정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u>&lt;신 설&gt;</u></p> | <p>제5조의8(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p> <p>1.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p>                                                                                                                                                                                                                                      |

| 현행 | 개정안                                                                                                                                                                                                                                                                                                                                                                                                                                                                                                                                                       |
|----|-----------------------------------------------------------------------------------------------------------------------------------------------------------------------------------------------------------------------------------------------------------------------------------------------------------------------------------------------------------------------------------------------------------------------------------------------------------------------------------------------------------------------------------------------------------|
|    | <p>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p> <p>3. 계약상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p> <p>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3호에 준하여 하도급거래 금액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p> <p>5.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p> <p>6.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의</p>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u></p> <p><u>제5조의9(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p> | <p>경우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월(前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나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p> |

| 현행                                                                                                                                                                                                                                                                                   | 개정안                                                                                                                                                                                                                                                                        |
|--------------------------------------------------------------------------------------------------------------------------------------------------------------------------------------------------------------------------------------------------------------------------------------|----------------------------------------------------------------------------------------------------------------------------------------------------------------------------------------------------------------------------------------------------------------------------|
|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9. (생략)</p> <p>② ~ ⑤ (생략)</p> |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에 따른 적정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문의처

02)6788-5151

## 참고

###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예시)

####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계약예규)」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 가중치    | 비고              |
|--------------------|------------------|----------------|--------|-----------------|
| 공사수행능력<br>(40~50점) | 전문성              | 시공실적<br>(시공인력) | 20~30% |                 |
|                    |                  | 매출액 비중         | 0~20%  |                 |
|                    |                  | 배치 기술자         | 20~30% |                 |
|                    | 역량               |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 30~50% |                 |
|                    |                  | 규모별 시공역량       | 0~20%  |                 |
|                    |                  | 공동수급체 구성       | 1~5%   |                 |
|                    | 일자리              | 건설인력 고용        | 2~3%   |                 |
|                    | 소계               |                | 100%   |                 |
| 입찰금액<br>(50~60점)   | 금액               |                | 100%   |                 |
|                    | 가격<br>산출의<br>적정성 | 단가             | 감점     |                 |
|                    |                  | 하도급계획          |        |                 |
| 사회적 책임<br>(가점 2점)  | 건설안전             |                | 40~60% | ※ 공사수행능력에<br>가산 |
|                    | 공정거래             |                | 20~40% |                 |
|                    | 지역경제 기여도         |                | 20~40% |                 |
|                    | 소계               |                | 100%   |                 |
| 계약신뢰도<br>(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 감점     |                 |
|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 감점     |                 |
|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 감점     |                 |
|                    |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                | 감점     |                 |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